가족정책 국내동향

2024년 2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주요 현안

'온가족보듬사업'으로 가족 누구에게나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전국 가족센터에서 상담, 사례관리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1.15.]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66
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민생정책, 아이돌봄서비스 » 김현숙 장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만나 민생현장의 목소리 들어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1.2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85
여가부, 국가가 대신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뉴시스, 김혜경 기자, '24.01.27.]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7_0002607222
1인가구 5명중 4명 '고독사 위험군'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24.01.29.]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128/123271004/1
정부, '가족' 중심으로 탈북민 정책 전환	[뉴스캠프, 지영란 기자, '24.02.05.] https://www.newscampp.co.kr/article/view/ncp202402050002
66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권에 »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 17개 정부·공공기관, 66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4.02.06.]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05
다문화학생 18만 시대...대학생이 한국어 교육·학교생활 돕는다	[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24.02.06.] https://www.yna.co.kr/view/AKR20240205133800530?input=1195m
'아빠는 처음이지?'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뉴시스, 이연희 기자, '24.02.06.]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06_0002618315&cID=10219&pID=10200
1인 가구 증가에 '복지' 대상 바뀐다..."누구나 돌봄"	[SBS 뉴스, 한주한 기자, '24.02.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530719&plink=TOTAL&cooper=SBSNEWSSEARCH
韓 출산휴가·육아휴직 수준 'OECD 38개국 중 5위'	[조선에듀, 장희주 기자, '24.02.08.] https://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2/08/2024020880088.html
다문화 인구 115만명 시대... 정책 이끌 참정 기회 넓혀야	[세계일보, 박지원, 구윤모, 강승훈 기자, '24.02.08.]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07516526?OutUrl=naver
22대 총선 핵심 의제 '고물가·고금리', '저출생 대책'	[경기일보, 박용규 기자, '24.02.14.]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214580351
인구감소 원인 하나하나 따졌더니...지역별 족집게 대책 나왔다	[한겨레, 최상원 기자, '24.02.14.]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28380.html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유모차→유아차 보관소'로 변경	[뉴스1, 오현주 기자, '24.02.14.] https://www.news1.kr/articles/5320370
출산휴가 이유로 여성 소외는 안 돼...가족친화 문화가 성과 높여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24.02.1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21415545565399
자립준비청년 지원 늘었지만..."모르거나 부끄러워 이용 꺼려"	[국민일보, 김재환 기자, '24.02.1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44095&code=11131100&cp=nv

가족관련 법안 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 생활 · 돌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2024-02-15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상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 요청을 해당 관청에 할 수 있음. 그런데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에 신청 후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고, 그 기간동안 미성년 자녀와 양육부 또는 모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 및 제27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2024-01-26	2021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 수는 26만3천명에 이르고 있고, 시술 인원은 7만9천명에 이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안건에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2024-01-18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아동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및 제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인사・조직에 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분원이 없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명의로 소송을 할 수 없어서 소속 변호사들의 개인 명의로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함에 따라 직접소송 비율이 18.7%에 머물며 결과적으로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등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육비 채무자의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양육비 이행률이 40.3%에 불과하여 제재조치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하여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분원 설치 및 기관명의로 소송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직접소송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재조치 업무의 일부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2024-01-17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 영역인 아이돌보미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민간 육아도우미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할 뿐 만 아니라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임. 저출생 시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현실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실효적이고 신뢰성있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국가자격도입,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등록, 서비스제공기관・수요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도입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가정 폭력 · 가족 위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2024-01-26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겪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상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료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재난 피해자의 회복 지원이 어렵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재난 피해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코호트 조사)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신체・심리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2024-01-17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 (안 제93조제1호).

가족관련 연구 동향

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한부모 가구의 일-생활 균형 정책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양부모 가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배열을 한부모 가구 관점에서 재점검함으로써, 불균형적으로 유지되어 온 한부모 가구의 일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15」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2&idx=131940
	미래사회 대응 정책-인구 변화와 정부 중장기 전략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의 인구변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정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잘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인구변화 관련 정부 중장기 전략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인건강 정책, 국방인력 정책, 이민 정책, 인구감소 지역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감소와 이민 정책의 경우, 관련 예산의 상당한 비중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쓰이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등의 정책적 고려는 미흡하였다. 인구감소 지역 정책을 살펴본 결과, 주로 경제적 측면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전략을 연계할 수는 있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다층적인 지표를 보완하여 정부정책 평가를 위한 정교한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 미래대응의 관점에서 인구감소, 고령화 등 인구변화 관련 예산에 대해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의 기획성과 계획성을 강화하고 입법부 차원에서의 국가 중장기 전략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미래연구 연구보고서, 총서, 23-02」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6931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등 인구변화에 따라 기존의 양적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발전 전략의 전환 불가피하며,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응전략)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전략(완화전략)의 병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어촌 지역 등 인구감소지역 으로서의 인구유입을 위해 매력적인 거주지로서의 농어촌 조성 전략, 지역맞춤형 귀농귀어 모델 개발, 지역-대학-산업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한 제도 개선, 농어업 전문교육 및 근로환경 개선, 체류 및 관계 인구 등 활용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의료자원 확충,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스마트 농어업 및 농어촌 구축, 사회적 경제 등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접근, 인구감소 적응 및 도시규모 적정화 전략 등을 제시한다.	「국회미래연구 연구보고서, 총서, 23-04」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6922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개인의삶 관점 미래사회 전망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미래 예측 접근 기반 미래 전망 연구 체계 수립과 연구방법론 상호결합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미래 개인의 웰빙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축인 '지능형 기술 발전'과 '생활공간 변화' 관련 주요 동인을 탐색하고, 동인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미래 시나리오를 탐색함으로써, 시나리오 기반 전략과제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 전망을 이뤄내고, 다양한 미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 대안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차원으로 전개되는 다양한 환경 변화 동인과 이슈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가 마주할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탐색하고, 개인의 삶 관점에서 미래 사회 모습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사회와 개인의 모습은 1) '테크노크라시 주도 신뢰사회 속, 종속적 개인', 2) '협동적 다원주의 사회 속, 자기주도적 개인', 3) '파편화된 균열과 분열 사회 속, 각자도생의 개인', 4) '지능형 솔루션 주의 사회 속, 고립된 개인' 등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그려본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 속, 시나리오별로 파악된 기회와 위험 요소를 근거로,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미래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정책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미래 예측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할 다양한 경로의 미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회미래연구 연구보고서, 총서, 23-03」 https://www.nafi.re.kr/new/research.do?mode=view&articleNo=6921&article.offset=10&articleLimit=10
	코로나 전환기 다문화수용성과 집단간 관계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사태 등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의 이주배경 여부에 따른 집단 간 관계를 점검하고 다문화수용성의 향방을 파악하여 관련 의제를 개발하였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집안 간 관계가 형성되는 장이자 시민의 일상과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지역사회기관에 주목하였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18」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2&idx=131946
가족· 돌봄	2023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여성가족 분야는 지난 20여 년간 가장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영역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강조되는 오늘날 정책환경에서 여성가족 분야 연구 수행에 적합한 자료의 구축은 정책연구 성패의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음. 여성가족 분야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데이터는 여성의 삶과 가족에 대한 생애사적 변화를 추적조사하는 종단자료가 필요함. 또한 여성의 고유한 관점과 경험을 드러낼 수 있는 조사구조와 문항 설계가 필요하며, 여성의 일과 생애, 가족, 삶의 영역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연계분석 가능하게 하는 자료 구축이 필요함. 여성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구축하는 여성가족 분야 국내 유일의 패널자료로, 우리나라 여성의 삶과 가족구조, 가족과정 및 가족생활, 가족관계와 가치관, 일자리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전국 규모의 종단자료이며, 2007~2023년(17년차)에 걸쳐 전체 1~9차 조사자료가 구축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11」 https://www.kwdi.re.kr/research/projectView.do?p=5&idx=130893
	가족변화 관점에서 가족센터 사업 현황 분석 및 개편 방안 연구	정책수요자의 변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족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해 기존 가족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그중 이 연구는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인 가족센터 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원화되었던 가족정책 전달체계는 2016년 물리적 통합을 달성함. 그러나 두 센터의 사업 방향과 내용은 병렬 배치되었으며, 예산 등 운영시스템의 실질적 통합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가족센터'로 명칭만 변경됨. 선행연구에서는 기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추진된 전달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이선형, 2018; 김영란 외, 2019; 손서희 외, 2019; 김영란 외, 2020)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변화를 반영하는 개편 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이선형, 2018; 김영란 외, 2019; 박정윤 외, 2019)한 바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연구는 가족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의 방향성에 맞춰 가족센터의 사업을 개편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구체적으로 가족변화의 양상을 진단하고, 그에 비추어 가족센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센터의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음. 그 과정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와 협력적으로 대안을 탐색하였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24」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p=3&idx=131933